

社 說

시행 앞두고 제도적 보완 절실 —대학평가 인정제 시행에 부쳐

교육부는 기존의 대학교육협의회에서 비공개적으로 이루어져 왔던 대학평가제를 내년부터 '대학평가인정제'로 공식화시켜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육부에 따르면, 대학평가인정제는 그동안 양적평가에 힘을 쏟은 대학들에게 대학이 교육수준을 우수, 양호, 미흡 등 3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함으로써 각 대학 사이의 경쟁을 유발시켜 교육의 여건과 질을 향상해보자는 의도에서 나온 것이라 한다.

물론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데 이견이 있을 수는 없다.

그러나 그것의 시행엔 아직 문제가 있다.

교육의 질을 우수, 양호, 미흡으로 나누는 데 정부는 그 기준으로 학문의 성취도와 아울러 교육여건, 각 기업체의 채용기준, 대학별 입시 성적 등을 참고로 할 것이라 한다.

그러나 이러한 평가 기준들을 찬찬히 뜯어보면 도저히 우리 사회의 구조상 용납할 수 없는 문제가 있다. 대학의 입시 성적을 참고하겠다는 발상만 해도 그렇다. 그 술한 눈치 작전이다가, 경쟁률에 따라 주시시처럼 등락을 거듭하는 입시성적을 어느 잣대로 잴 것인지 명확하지 않다.

또 한편으로 새등급으로 나누어 평가한 뒤, 우수 판정을 받은 대학에게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정부의 지원을 늘리겠다는 관료적 발상의 허점을 지적할 수 있다. 그것은 무엇보다 대학평가인정제의 의의를 무시하게 하는 요인이기도 하다. 왜냐하면 무릇 대학의 발전은 인재 육성이라는 측면에서 그토록 이루어져야 하고, 그것이 이루어질 때에야 교육의 질을 높이자는 이 제도의 의의가 살아나기 때문이다. 사실 교육 여건이라

는 면만 본다면 대학별 차등을 따지자는 것은 새삼스러운 일이다. 대학의 규모나 연한에 따라 어느정도 그 여건이라는 것이 가능하고 있는데 말이다. 아울러 우수 판정을 받은 대학에게 그 혜택이라는 것이 더 부여된다고 하자, 그렇다면 아직 더 커야 할, 더 발전해야 할 대학은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나마 재원이나 지원이 절실한 '미흡한 대학'들은 문을 닫아야 한다는 말인가. 혹 이것이 대학의 부익부빈익빈을 심화시키게 될 것은 아닌지 심각히 고려해볼 일이다.

그러므로 교육부는 대학교육평가제를 실시하기 전에 먼저 몇가지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우선 현재 국립대학과 사립대 사이에 차등을 두는 국고보조금을 평등하게 지급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립대학의 재정 규모에 비해, 등록금으로 재정을 충당하는 사립대는 예산 운용의 범위가 너무 제한되어 있다. 따라서 사립대학의 재정난을 고려하여 국고보조금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한다. 적어도 동일 선상의 경쟁은 가능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보면, 교육부의 이번 대학평가인정제는 도처에 난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소위 8학군이 교육 균등화를 해친다면 여러 대책을 모색하겠다는 교육부의 발표와 이 제도는 얼마나 배치되는가. 우리는 이 제도가 한 대학의 혹은 한 학과의 발전을 위한 것이 아니라 우리 나라 대학 전체의 발전을 위하여 쪽으로 활용돼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기본적인 여건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이 제도의 강행은 세간에 떠도는 저의에 대한 소문을 증폭시킬 뿐이다. 혹 시위 안하는 학교를 '우수한 학교'로 판정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외교적 노력보다 남북 상호논의 중요해 —UN가입후 통일정책에 바란다

지난 18일 뉴욕 유엔본부 건물 앞에 태극기와 인공기가 나란히 올랐다. 대한 민국과 조선 민주주의 인민공화국은 한반도에 실재하는 두개의 주권국가로서 전세계에 만장일치로 인정받은 것이다. 국제연합에의 남북한 동시가입은 한반도의 현실을 모두가 인정했음을 의미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것은 비록 국제정치상의 역학관계가 낳은 산물임이 분명하지만 UN의 평화유지국이 되었음은 우리 민족의 역사에 새로운 획을 그은 사건임에 틀림없다.

노태우 대통령은 회원국 국가원수로서 최초의 연설을 지난 24일 유엔에서 가졌다. 민족의 통일을 위한 세가지 원칙을 천명하고 이를 실천하기 위한 방안과 국제평화를 위한 방안과 국제평화를 위한 적극적인 기여의지를 표명하였다. ▲휴전체제의 평화체제 전환 ▲실질적인 군축 ▲사람과 물자 정보의 교류확대등을 제시 하면서 이를 위해 남북한 상호간의 군사정보교환, 기동훈련 부대이동의 사전통보, 상주감시관의 상호교환등을 역설하였다. 더우기 남북한의 핵문제에 대한 협의의사를 비추기도 하였다. 한편으로는 기자회견장에서 국가연합→연방제→정치통합의 3단계 통일 구상을 밝혀 기존의 정부통일 방안인 '한민족통일방안'이 크게 수정되고 있음에 주목하지 않을 수 없다.

UN의 남북한 동시가입은 서울과 평양의 냉전체제 붕괴를 상징하는 것으로 해석하는 오류를

범해서는 아니될 것이다. 남한과 북한은 분단이래 46년의 기간동안에 진실된 통일의지를 가지지 않은채 분단을 통치기반의 수단으로 악용해오면서 민족통일이라는 명분을 심본 환용해 상호 적대적 의존관계를 유지 발전시켜 온 것이다. 오히려 유엔대회가 한반도문제로 남북한이 갈등을 표출시키는 장소로 변질될 수도 있음에 유의하여야만 하겠다. 물론 남한의 대북정책과 북한의 대남정책이 유엔가입을 시점으로 근본적이고 새롭게 변화하고 있음을 부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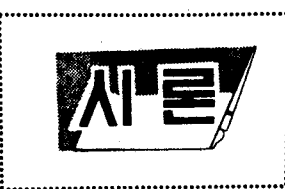
통일은 선언만으로 이루어질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다. 그동안 정권들은 구체적인 현실적인 통일의지를 노력보다는 국민에게 가슴만 부풀려주는 행위들만 보여주어 왔음을 상기하고자 한다. 이제는 보다 현실적이고 완벽한 통일의지를 진실로 보여주어야 할 시점인 것이다.

밖으로만 포장하기에 급급하다면 문제가 해결되기 보다는 오히려 악화만 된다는 점을 유력자들은 분명히 인식하여야 하겠다. UN의 회원국이 되었다는 집만을 강조하기 보다는 국내적인 난제들을 하나하나 해결해 나가는 모습이 더욱 절실한 것이다.

대외향적인 면보다는 대내지향적인 면을 먼저 강조하는 것은 통일은 우리 스스로의 내부문제의 해결을 통해 진정으로 가능하기 때문이다. 수선제가를 먼저 해야만 하는 것이다.

전쟁놀이와 '개구리'죽음

—한국원서 총기 사망 사건과 범죄와의 전쟁선포



1. 서울대생 사망 사건

민생치안을 위한 '범죄와의 전쟁선포'가 시국사건에 적용돼 논란이 계속되는 가운데 경찰의 총기남용으로 또 한명의 무고한 시민이 사망했다.

지난 17일 서울대생의 신원2동 파출소 향의기습사위도중 시위대였을 지나 귀가하던 서울대 대학원생 한국원(27)씨가 경찰이 쏜 '유탄'에 맞아 병원에서 후송중 사망한 사건이 발생한 것이다. 이는 서울대생 2명이 교내사위도중 강제연행 된데 대한 항의와 학교에 대한 관악경찰서가 옮겨질 것에 대한 규탄시위였으며, 학생들의 파출소 향의시위를 저지하던 이 파출소 조동부 소장이 시위대를 향해 총 쏘았을 때 사망한 것이다.

사건이 발생한 장소는 신원2동 파출소에서 직선거리 108m 떨어진 곳이다. 신원 파출소에서 도망친을 지나 삼선교와 가나다재와 앞인 이곳은 사건 발생 8일이 지난 25일까지 경찰의 경비가 펼쳐지고 있었으며, 취재중이던 시사저널 기자가 경우 취재도중 약간의 마찰이 일어나 사건에 대한 언론통제를 보여주었다.

사건 발생후 계속 상황을 체크하던 서울대학교 교내처와 경찰은 26일 서종원 차원의 집회 및 가두 진출을 전개하였으며, 28

일에는 국민대회를 치루어 내었다.

II. 경찰의 강경대응

이에 따라 경찰의 공격적 진압 형태와 최루탄 사용의 급증, 공공건물 습격대 총기사용등 공공력 사용과 치안행정의 문제점을 단적으로 드러내고 있다.

결식사 등은 경찰당국의 치안행정이 누구를 겨냥한 것인가를 잘 말해주고 있다. 이와 함께 일반법률자에 대한 총기추적, 사용, 그리고 경찰의 사적인 총기사용범죄가 사회의 폭력화현상이나 국민들에게 공포감을 안겨준 것도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 사건에서도 보여

설이후 이례적으로 검찰조사에 대해 나름대로 작성한 '소견서'를 통해 경찰의 총기사용은 경찰관 직무수행에 의한 정당행위이며, 경찰관법상 총기사용에서 발생한 사고(7)에 대해 법적 책임은 없으며 단지 과실에 대한 책임은 피할 수 없다는 입장을 보였다. 이 논리는 초헌법적이고 탈

최루탄 사용급증 과잉진압 실제 드러내 경찰청, 소견서 통해 단순 '사고'로 치부

한편 작년 10월13일 범죄와의 전쟁선포이후 공공력에 의한 희생이 늘어나고 있다. 실제로 91년 현재 최루탄 사용량은 23만 9백14발로 이는 작년 같은 기간의 16만8천4백48발보다 37% 증가한 것이며, 시위와 과잉진압이 잦았던 88년에 비해서도 9%나 많이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시위대의 공공건물 공격 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경찰의 총기사용은 올해들어 1백33건이라고 경찰청이 밝히고 있다. 특히 파출소 등 공공건물 기습사위도진압에 대해 지난 8개월간 29건이나 총기 및 살탄 사용이 있어 왔다고 발표했다.

이번 한씨의 경우는 시위와는 무관하게 길을 지나가다가 피격, 사망한 것으로 경찰의 시위에 대한 강경진압이 부른 일반시민의 피해가 갈수록 많아지고 있다. 지난 5월 전국민적 분노와 투쟁을 일으킨 계기가 됐던 강경대서 쇠파이프사망, 김귀정씨의 최루탄

지듯이 정부와 경찰당국은 한국원씨 사망과 같은 사례는 총기사용 '가급적'있을 수 있는 우연적인 일이라며 유감표현에만 그쳐 피해자 가족 및 국민들의 울분과 불안감을 더욱 증폭시키고 있다. 정부가 파출소, 공공건물 피습에 강경하게 대처하지 못하면 담당자를 경질한 것을 보더라도 일선 경찰관의 책임으로 돌릴 수 만은 없다. 일례로 지난10월 중앙대생들의 명수대파출소타격 이후 파출소장이 직무해제된 적이 있었다.

III. 경찰관의 총기사용에 관한 논란

며칠전 한씨의 부검에서 유탄이었다. 조준각도의 문제다, 정당방위나 과잉진압이나 따위의 근본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으며 근본적인 대책마련이나 처벌도 '눈가리고 아웅'하는 식의 미봉책에 지나지 않았다. 특히 경찰청은 창

범적인 인권침해와 국민의 생존권 위협임을 자인한 셈이다.

이러한 경찰의 태도는 박종철씨 고문살인, 이한열씨 최루탄 사

(송보영 기자)

92년 정국기상도



지난 24일 오후3시 판문점 중립국 감독 회의실에서는 북한지역 학술답사 준비를 위한 실무접촉이 있었다. 북한지역학술답사 준비위원장 김호상(건국대·23)군동 4명과 김일성종합대학 교문학부 대표4명이 만난 이번 실무접촉에서 양측은 방북일정, 답사단 구성과 그 규모 등에 전격적으로 합의하였다.

합의문을 통해 양측은 '양국의 학술 답사 교환사업은 지난 8·15 남북해의 동포 청년학생 통일회담에서 합의된 대로 조국통일 범민족청년학생연합(이하 범청학련)의 통일적인 관할하에 실시한다'고 밝혔다.

그러자 즉시 정부측에서는 정치적 목적을 띤 방북은 허용할수 없으며 특히 전대협이나 범청학련 같은 반국가단체와 연계한다는 것을 이유로 방북을 불허하였다.

지난 89년부터 추진해온 1천개 학과

방북투쟁과 지난학기 서울지역대학신문 기자연합의 방북취재대와 마찬가지로 형식적인 절차는 승인하였으나 끝까지 꼬투리를 잡아 결국 학생들의 방북의지를 무산시켰다.

그런데 방북이 승인되지 않을것이 라는 기사의 바로 위에는 UN가 가입과 관련 노태우 대통령의 UN 연설이 보도되었다.

다. UN에서의 연설은 단순한 선전효과 일 뿐이라는 것이 입증된 셈이다. 이에 발맞춰 언론에서는 앞다투어 '범청학련의 학술 답사 불허', '북의 이간전술에 따라 순수 퇴색'등 각종 보도를 통해 정부가 불허방침을 내릴수 밖에 없는 절박한(?) 상황을 설명하기에 바빴다. 또한 학생들에게는 온갖 비

방북의 무산은 결국 학생들에게 돌아갔다. 기성언론의 일방적 보도태도는 이미 잘 알려져 있으나 이번에도 또다시 한번 확인된 셈이되었다.

지난 40여년간 언론은 남·북문제에 있어서 정부의 논리를 대변하며 통일세력을 괴멸하였다. 언론은 이전까지 올바른 민간교류나 방북 방안을 단 한번도 제시해보지 못했다.

1천개학과 방북투쟁과 서대기원 방북취재는 장구단일화 논리를 깨기위한 학생들의 노력이었다. 이제 여기에 건국대 학생들의 방북이 무산됨으로써 더욱 확실해진것은 아무런 근거도 제시하지 못하고 통일논의를 독점하겠다는 장구단일화 논리를 하루빨리 깨야만 한다는 것이다.

아울러 UN가입과 관련 발표된 통일논의 역시 그 실체를 벗겨내야 한다.

<특집부>

전대 방북답사 무산에 대한 언론보도 '북의 노리게'... 실무접촉 퇴색시켜

연설의 요지는 통일문제에 있어서 3통의 원칙 즉 통선, 통행, 통관의 자유를 인정하며 이것을 기조로 하여 통일로 나아가자는 것이었다. 그러나 실제 건국대 학생의 방북은 승인되지 않았

난의 화살을 퍼부었다. 북의 노리게였다는 학생들은 처음부터 정치적 의도를 염두에 두었고, 북에서 가지고온 합의서에 아무런 논의없이 합의했다고 공격했다.

10월, 그 깊은 곳까지 가득 채워진 계절이여!

태백태로 神은 오곡의 마지막 결실을 다듬고 젊은 지성은 고쳐와 사색으로 서서히 고개 숙이는 10월입니다. 해마다 나무에 열매가 맺어지지만 그것이 매년 새로운 열매이듯 항구적인 가치있는 사상 또한 사색과 고뇌를 통해 늘 새롭게 거듭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진리가 영그는 강의실에서 교정 뒤안의 느티나무 아래서 매년 탐험한 막걸리 한사발 앞에 두고서 해를 사색과 고뇌에 빠져 보십시오.

그리고 가끔씩은 함께 어울릴 수 있는 열린 마당도 찾아야겠지요?

문화달력은 이렇게 활용됩니다
여러분들이 마련한 소중한 대학사를 알리기 위해 현대·문화가 제공해 드리는 콘텐츠 여러분들이 보내주시는 자료로 만들어집니다.
널리 소개하고 싶은 문화행사가 있으면 행사 전 25일까지 현대·문화가 (서울 종로구 계동 140-2, 전화 746-3325)로 알려주시면 성심껏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